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81호
2022. 11. 14

정책동향

■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기대

시장동향

■ 베트남 건설산업의 성장 전망과 대응 전략

산업정보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투자

■ BCG 2022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대한 기대

- 산업 현실을 종합 고려한 중기 법정계획으로 평가 가능, 조기 정책화 이루어져야 -

■ 지난 8일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임. 올해는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되고 제7차 계획을 수립하는 해임.
 -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계획 수립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년간 21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단체 및 20개 연구기관, 학회와 함께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월 8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발표함.
 - 올해는 향후 우리 건설산업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법정계획(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해로 이 중 첫 번째로 공개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을 엿볼 수 있음.

■ 전기(前期)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지난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6차 계획의 36개 세부과제 중 대다수(34개 세부과제)를 수행 완료하였거나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정량 목표의 절반 달성과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준제도 부문 추진실적이 우수하나, 업계의 생산성 향상 및 해외 수주 확대 등은 미흡하였다고 종합 평가함.
 - 지난 6차 계획에서 제시한 2015년 기준 노동생산성 40% 향상, 2016년 기준 건설업 사망자 수(554명) 감축의 주된 정량 목표는 실제 2021년 사망자 수는 25% 감소(417명)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지수는 오히려 지난 2015년 100% 기준 5.1%p 감소한 94.5%에 그쳤다고 평가함.
 - 기타 전기(前期)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영역별 성과평가 결과(국내건설기술 부문별 주요 현황)는 <표 1>과 같음.

<표 1> 국내건설기술 부문별 주요 현황

스마트건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18.10.)을 통해 기술 분야별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기술의 현장 적용 미흡 * (건설업) 노동생산성지수 4년간 하락('18. 102.7 → '21. 94.5) * (제조업) 생산 자동화·스마트화로 상승('18. 110.7 → '21. 123.3) • BIM은 설계분야에서 활용이 확대 중이나, 시공 등 건설 쏘 단계 도입 및 인력양성 등 세부 계획 미흡
--------------	---

<표 1> 국내건설기술 부문별 주요 현황-(계속)

<p>건설 Eng. 역량 및 발주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PM 시장 확대 및 선진기업 PM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은 미미한 수준 * 국내 Eng. 기업들은 現 제도상 PM사업참여 및 실적확보 어려움 노출 • 기술형입찰 및 중심제 등 기술중심 발주제도 실효성 한계 * 기술보다는 영업력 중심 낙찰현상 발생, 평가 공정성 문제 제기
<p>건설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대비 '21년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554→417명)하였으나, 산업 내 비중은 50%로 여전히 높은 상황 *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71.5% 발생, 안전 취약 • 스마트기술기반 안전관리체계 현장 적용 체감도 미흡 *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
<p>건설기술 인력 육성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90만명 증가에 따라 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 수준 개선 미흡 * '의무교육'이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수요'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인 역량 향상 실효성 문제 제시 • 인구 감소 영향으로 건설인력 고령화·숙련기술자 부족 문제, 청년인력 고용의 어려움 확대 * 최근 20년간 50대 이상 34%p 증가, 30대 미만 22%p 감소
<p>R&D, 데이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숲 단계에 걸친 스마트건설기술 R&D 확대 미흡 • 건설산업 주체 간 Big Data 유통 및 관리, 데이터 표준화 추진 미흡 * 시공의 설계·Eng. 및 운영·유지보수(O&M) 단계와의 통합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

이런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건설산업 환경변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새로운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제도 혁신을 위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정착'을 비전으로 3개 정량 목표 및 5개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함(<표 2> 참조).

- (정량 목표 1) 건설기술 고도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증가 추세 전환(생산성 지수 '21년 94.5 → '30년 110 이상 성장)
- (정량 목표 2)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 강화(엔지니어링업체 해외매출 225대 업체 중 '21년 11개에서 '27년 15개 이상으로 육성)
- (정량 목표 3) 사고유형 및 공종별 안전사고 다발 분야의 집중적 지원 및 사망사고 저감 대책 수립('27년까지 '21년 대비 건설사고 사망자 수(417명) 절반 아래로 감소)

<표 2>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안)

분야	중점 추진 과제(15)	추진 방안
<p>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p>	<p>① BIM 도입으로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 BIM 전면 도입 • BIM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 • BIM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현장서류 디지털화

<표 2>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안)-(계속)

분 야	중점 추진 과제(15)	추진 방안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 (계속)	②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 자동화 • 현장 → 공장 중심으로 전환
	③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건설 거버넌스 구축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육성 •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반 마련
건설Eng. 산업 경쟁력 제고	④ 기술 중심의 발주제도 개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공사 외에도 성능개선공사, 리모델링 공사, 스마트기술 적용 공사 등으로 기술형 입찰 확대 • Eng. 중심제 고도화
	⑤ 업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대가기준 현실화 • 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낙찰가 및 낙찰률 상향 • 업계 능력평가 제도 도입 추진(Eng. 산업 및 업계 특성 고려) • 강소기업 육성 토대 마련 및 건설Eng. 외연 확장
	⑥ 평가 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제도 평가방식의 개편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표준용역계약서 마련, 제도 신설, 민간공사 점진적 확대)
	⑦ 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 활성화 기반 마련 •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공기업과 민간 Eng.이 동반 진출하는 Team Korea 형태 PM사업 해외진출 지원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	⑧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청은 적정 공기 및 비용을 확보토록 하고, 발주청 및 지자체의 현장 관리, 감독 강화 • 설계 안전성 검토(DfS) 관련 제도 보완 및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 시공이력 관리 후 감리 제출 의무화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시 경력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및 교육 강화 등 감리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
	⑨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및 중복규제 합리화 •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구체화 및 현실화 •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 안전관리 취약한 소규모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건설산업 ESG 경영 유도.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⑩ 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 친환경 건설 유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⑪ 시설물 안전,성능 확보 및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 유지관리 분야 산업 육성 • 기반침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탐사를 확대하는 등 기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 관리 강화

<표 2>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안)-(계속)

분 야	중점 추진 과제(15)	추진 방안
청년 등 건설기술인 육성	⑫ 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 관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력 유입 • 건설인력 수급 지원 • 기술인 경력관리제도 개선
	⑬ 기술인 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지정.관리체계 지속 개선 • 교육 프로그램 품질 향상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산업 고도화	⑭ 미래수요에 대응한 R&D 추진 및 상용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OSC 기술 고도화 등) •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 기후/도시환경 변화, 해외건설 신수요 대응 • R&D 성과의 사업화 및 활용 활성화
	⑮ 데이터 개방, 공사비산정기준 등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건설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조성 • 공사비 및 적정공기 산정기준의 역할 강화 • 건설사업사후평가시스템 확대 및 서비스 강화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2023~2027), 공청회 발표 자료

■ 산업 내 여러 현안을 고려한 계획 수립으로 평가 가능, 계획의 조기 이행 추진 필요 시점

- 이번 제7차 계획안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R&D 촉진 및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건설공사 품질 상향 및 안전 확보의 범위 내 건설정책의 중기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기존 법정계획과 다른 다음의 특성을 보임.
 - 첫째, 지난 2018년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주된 개선영역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BIM, OSC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강화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 둘째, 관련 업계가 해당 시기 요구하던 업 활동 영위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수준(예 : 대가 현실화, 발주제도 개선 등)의 반영을 넘어 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과제(강소기업 육성, 건설엔지니어링 업역 개편 등)를 다수 포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셋째, 그간 건설업의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 집중하였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내에서 만연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불공정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계획을 최초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 매우 합리적 방안 마련으로 평가 가능함.
 - 넷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대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핵심 사항으로 반영코자 하였던 발주자의 적정공기·공사비 반영 의무 부여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사항임.
 - 다섯째, 계속된 건설안전의 중요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 있는 추진계획 발표와 더불어 복수 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건설안전 규제의 합리적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는 점 또한 합리적 사항임.

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베트남 건설산업의 성장 전망과 대응 전략

- 향후 8년간 지속적 성장 예상, 민간부문 주도의 교통인프라 사업 확대 전망-

경제성장 견인의 주요 역할 수행, 베트남 현지 건설산업 지속 성장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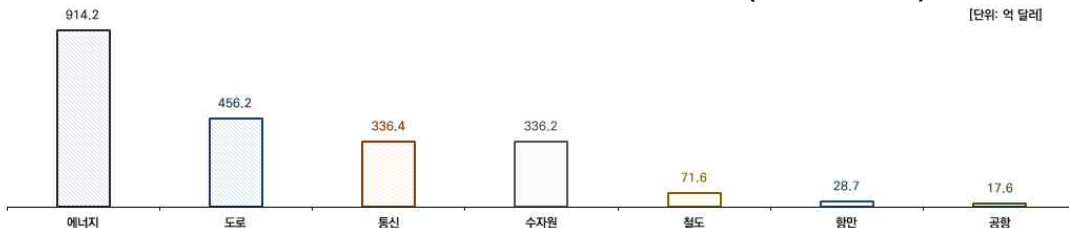
- 2022년 3분기(1~9월) 현지 경제성장률은 8.83%를 기록하였으며 산업별 성장률 기여 비중은 ‘서비스업(54.17%), 공업 및 건설업(41.79%), 농림수산업(4.04%)’ 순으로 나타남. 1)
 -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산업(2021년 기준)²⁾ 비중은 총 20개 산업 중 4위(6.5%)를 기록하였으며, 건설산업 관련 종사자 수는 450만명으로 5위를 나타내는 등 건설업은 주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함.
- 현지 인프라 산업 규모(2022년 기준)³⁾는 5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30년 110억 달러로 9.8%의 연평균 증가율(CAGR)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도시화로 인한 교통 및 위생 분야 등의 도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 증가,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 인프라 공급 확대 등 상당 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향후 8년간(2022~2030년)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반영한 총 투자 소요액⁴⁾은 2,161억 달러로 추정되며, 투자액 차이⁵⁾ 규모는 4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

<표 1> 세부 인프라 분야별 총 투자 소요액과 투자액 차이 규모 현황(2022~2030년)

구분	에너지	통신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수자원	총계	
투자 소요	금액	914.2	336.4	17.6	28.7	71.6	456.2	336.2	2,160.8
	비중	42.3%	15.6%	0.8%	1.3%	3.3%	21.1%	15.6%	100.0%
투자액 차이	금액	42.4	0.0	4.5	27.2	19.8	186.8	164.8	445.5
	비중	9.5%	0.0%	1.0%	6.1%	4.4%	41.9%	37.0%	100.0%

- 인프라 분야별(7개) 총 투자 소요액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914억 달러(42.3%)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도로(456억 달러), 통신(336.4억 달러), 수자원(336.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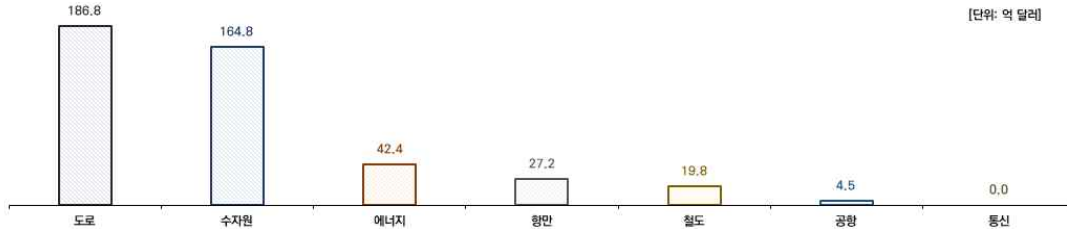
<그림 1> 인프라 분야별 총 투자 소요액 전망 (2022~2030년)



1)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2022. 10. 24), “2022년 3/4분기 베트남 경제동향”
 2) Asian Development Bank(2022. 08),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2: Vietnam”
 3)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호치민 무역관(2022. 4. 11), “2022년 베트남 인프라 산업 현황 및 전망 살펴보기”
 4)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검색일자: 2022. 11. 7), <<https://outlook.gihub.org/>>
 5) 투자액 차이란 ‘SDGs를 반영한 필요 투자액 - 예상 투자액’ 차이를 의미함.

- 인프라 분야별 총 투자액 차이 규모는 도로가 187억 달러(41.9%)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수자원(165억 달러), 에너지(42.4억 달러), 항만(27.22억 달러)’ 순으로 분석됨.

<그림 2> 인프라 분야별 총 투자액 차이 규모 전망 (2022~2030년)



■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령 마련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 노력 지속

- 지난 2020년 6월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건설사업에 민간 및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Law on Private-Public Partnership Investment (Law No. 64/2020/QH14)」을 제정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2021년 3월 PPP 법의 세부조항 및 안내 시행령(Decree No. 35/2021)⁶⁾과 PPP 프로젝트의 재무관리구조 규정 시행령(Decree No. 28/2021)⁷⁾ 공표를 통해 세부시행 지침 마련과 내용을 구체화함.⁸⁾

<표 2> 베트남 PPP법 및 세부시행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투자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분야 및 분야별 최소 투자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분야</th> <th>부문</th> <th>최소 투자자본금</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교통</td> <td>도로, 철도, 내륙수로, 해상 운송, 항공 운송</td> <td>1조 5,000억 동</td> </tr> <tr> <td rowspan="2">2</td> <td rowspan="2">발전·전력</td> <td>신재생에너지</td> <td>5,000억 동</td> </tr> <tr> <td>전력망, 발전소(수력, 전기법에 규정된 국가 독점 사업 제외)</td> <td>1조 5,000억 동</td> </tr> <tr> <td>3</td> <td>관개</td> <td>배수시설, 급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td> <td>2,000억 동</td> </tr> <tr> <td>4</td> <td>의료</td> <td>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 예방적 건강관리, 테스트</td> <td>1,000억 동</td> </tr> <tr> <td>5</td> <td>교육 및 훈련</td> <td>교육, 훈련 및 직업 교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td> <td>1,000억 동</td> </tr> <tr> <td>6</td> <td>IT 인프라</td> <td>디지털 정보 인프라, 디지털 경제, IT 개발, DB 등</td> <td>2,000억 동</td> </tr> </tbody> </table>	구분	분야	부문	최소 투자자본금	1	교통	도로, 철도, 내륙수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1조 5,000억 동	2	발전·전력	신재생에너지	5,000억 동	전력망, 발전소(수력, 전기법에 규정된 국가 독점 사업 제외)	1조 5,000억 동	3	관개	배수시설, 급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000억 동	4	의료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 예방적 건강관리, 테스트	1,000억 동	5	교육 및 훈련	교육, 훈련 및 직업 교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	1,000억 동	6	IT 인프라	디지털 정보 인프라, 디지털 경제, IT 개발, DB 등	2,000억 동
	구분	분야	부문	최소 투자자본금																											
	1	교통	도로, 철도, 내륙수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1조 5,000억 동																											
	2	발전·전력	신재생에너지	5,000억 동																											
			전력망, 발전소(수력, 전기법에 규정된 국가 독점 사업 제외)	1조 5,000억 동																											
	3	관개	배수시설, 급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000억 동																											
	4	의료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 예방적 건강관리, 테스트	1,000억 동																											
	5	교육 및 훈련	교육, 훈련 및 직업 교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	1,000억 동																											
6	IT 인프라	디지털 정보 인프라, 디지털 경제, IT 개발, DB 등	2,000억 동																												
투자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분야 외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이 있고 PPP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총 투자액이 2,000억 동 이상으로 총리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예외로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BOT (Build-Operation-Transfer), ② BTO (Build-Transfer-Operate), ③ BOO (Build-Own-Operate), ④ O&M (Operate-Management), ⑤ BTL (Build-Transfer-Lease), ⑥ BLT (Build-Lease-Transfer), ⑦ 여러 방식 조합 등 																														
최소 자본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는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법(Law No. 64/2020/QH14) 제70조 및 제72조에 규정된 국가자본을 제외하고 총 프로젝트 자본금의 15% 이상 납입 필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규제 관련 요건 충족 필요 																														

6) 「ND-CP detail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vestment in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7) 「ND-CP the financial manage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jects」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2022 베트남 진출전략”

구분	주요 내용
투자자 선정 시 우대사항 (입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제안 승인 → 5% 우대율 적용 국내 공급자 사용(총 투자금액 25% 이상) → 3% 우대율 적용 국제투자자 입찰에서 국내 재화, 공급품, 자재와 장비(총 투자금액 25% 이상) 사용 → 2% 우대율 적용
투자자 선정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개입찰, ② 경쟁적 협상, ③ 투자자 직접지정, ④ 특수한 경우 투자자 선정
투자 인센티브 및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자 및 PPP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세제 / 토지 이용료임대료 및 기타 혜택 수혜, ② 투자자 자산 담보 제공 권리 보장, ③ 프로젝트 시설의 상업적 운영 권리 보장, ④ 투자자에게 허용된 토지 사용권(프로젝트 계약 기간) 보장, ⑤ 외화 태환(사업 경비제외, 현지 화폐로 받은 프로젝트 수익의 30% 이내 외환으로 환전해 반출 허용) 등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2022 베트남 진출전략"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교통인프라 분야 민관협력사업(PPP)발주 확대 전망, 사업 참여 위한 국내 기업의 준비 필요

-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주요 인프라 시설의 확충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계속된 재정 적자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해외 투자자 유치 확대를 통한 재원 조달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령 제정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 중임.
 - 현지 정부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6%를 인프라에 할당하나 해당 지출의 90%는 공공예산임. 이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와 재정 정책에 부담을 주고 있어 민관협력사업(PPP)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한 인프라 시설에 관한 투자유치 확대(민간자금 비중 20%)를 도모하고자 함.⁹⁾
- 현지 정부가 경기부양과 경제 구조 다각화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한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의사가 강력하고 민관협력사업(PPP)에 기반을 둔 사업 발주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 관계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참여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지정(2022년 기준)된 인프라 프로젝트는 총 176개(322억 달러)로 '도로 및 교량' 부문의 비중이 50%를 상회 하는 것으로 조사됨. 교통 인프라 시설에 관한 외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지난 2013년 한국수출입은행과 베트남 교통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판번(Tan Van)-연짚(Nhon Trach) 도로건설사업'은 국내 기업의 수주가 예상되었으나, '부지보상 형식, PPP 표준협약서 부재 등' 여러 문제로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¹⁰⁾
 - 지난 2018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현지 민관협력사업(PPP) 제도 구축 지원 사업¹¹⁾ 추진을 통하여 국내 건설 및 관련 기업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쟁국 기업과의 수주 경쟁 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김화량(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

9) Vietnam Briefing 기사자료(2022. 9. 9), "Why Vietnam's Infrastructure is Crucial for Economic Growth"

10) 박재현(2020. 10. 20), "베트남의 첫 PPP 법률 제정, 인프라 투자에 날개는 달 것인가?";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2012. 9. 10),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순환도로 EDCF로 만든다"

11) 기획재정부(2019), "베트남 PPP법 제정 및 프레임워크 개발계획 수립 지원"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투자

-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2022년 8월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고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법을 통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 및 제조 부문에 투자하여 2030년까지 미국 탄소 배출량을 약 40% 감소(2005년 대비)시키고자 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4,99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7,38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어들이며 약 2,38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완화함과 동시에 통화량을 감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도 얻고자 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재정 수입과 투지지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정책	2022~2031년간 재정효과
(A) 재정지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 3,910억 달러
	의료 보험 보조금 확대	- 1,080억 달러
(B) 재정수입	처방약 가격 개혁	+ 2,810억 달러
	법인세 최소 세율 15% 적용	+ 2,220억 달러
	IRS 세금 징수 강화	+ 1,01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시 1% 세금 부과	+ 740억 달러
	초과 영업손실 제한 2년 연장	+ 530억 달러
	메탄 배출세 부과 등	+ 70억 달러
재정적자 순감축액 (B-A)		2,38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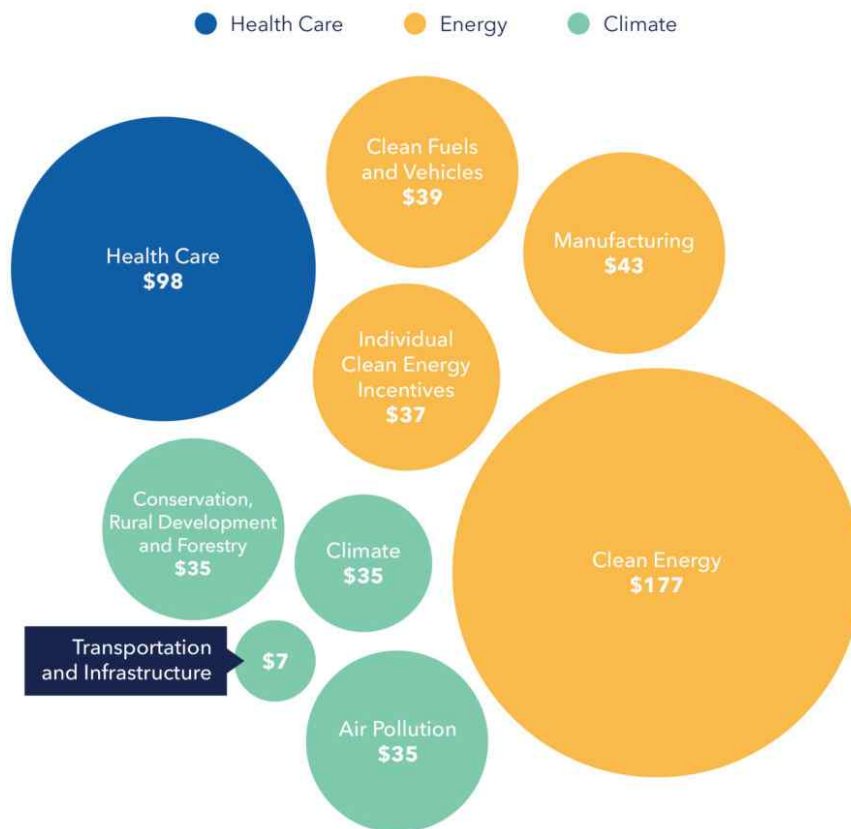
자료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BO Scores IRA with \$238 Billion of Deficit Reduction" (2022.9.21)

■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투자에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그림 1> 참조).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에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세액공제,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및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등이 포함됨.

<그림 1> 인프라 감축법(IRA)에 따른 투자 계획(2022~2031년)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The Council fo State Governments, "CSG analysts have compiled elements of the bill that may directly impact states." (2022.8.16.)

■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지난 5월 EU가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 유럽 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REPowerEU”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에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이와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친환경 에너지 발전시설 및 친환경 제조시설 건설이 활발해질 것이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건설시장의 확대가 전망됨.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관련 기준 정립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BCG 2022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

- 건설분야 혁신기업 탄생을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 -

2022년 글로벌 5대 혁신 기업 : Apple, Microsoft, Amazon, Alphabet, Tesla¹²⁾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22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 순위에서 애플(Apple)사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함.
 - 가장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한 기업은 모더나(Moderna)로 2021년 42위에서 7위로 상승함. 나이키(Nike)도 지난해 24위에서 올해는 12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다국적 기술기업인 Nvidia와 중국의 e커머스 기업인 징둥(Jingdong)은 각각 15와 30위로 새롭게 50위안에 포함됨.
 - BCG가 처음 글로벌 50대 혁신기업 순위를 발표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50위안에 계속 포함된 기업은 총 7개로,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삼성(Samsung), IBM, 토요타(Toyota), HP임.
 - 50위 안에는 애플을 포함한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분야의 기업이 13개로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의 기업이 27개로 전체 순위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1> 글로벌 50대 혁신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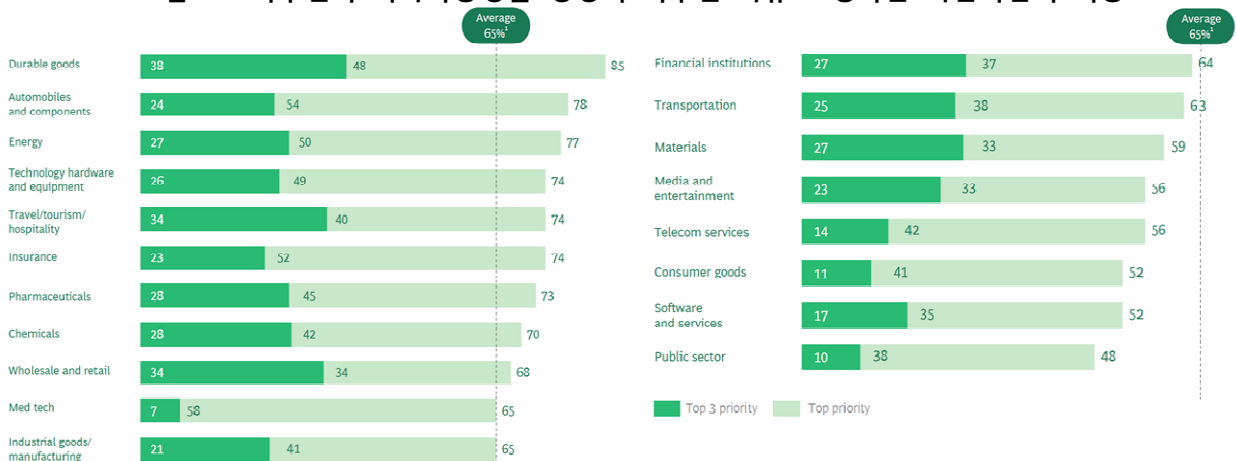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1	Apple	Apple	18	Target	Pfizer	35	Merck&Co	Adidas
2	Alphabet	Microsoft	19	HP	Oracle	36	Novartis	Coca-Cola
3	Amazon	Amazon	20	Johnson & Johnson	Siemens	37	eBay	3M
4	Microsoft	Alphabet	21	Toyota	Toyota	38	PepsiCo	PepsiCo
5	Tesla	Tesla	22	Salesforce	Alibaba	39	Hyundai	Hitachi
6	Samsung	Samsung	23	Walmart	HP	40	SAP	SAP
7	IBM	Moderna	24	Nike	Lenovo	41	Inditex	Tencent
8	Huawei	Huawei	25	Lenovo	Zalando	42	Moderna	General Motors
9	Sony	Sony	26	Tencent	Bosch	43	Philips	Ford
10	Pfizer	IBM	27	P&G	Johnson & Johnson	44	Disney	Intel
11	Siemens	Meta	28	Coca-Cola	Cisco	45	Mitsubishi	ByteDance
12	LG	Nike	29	Abobott Labs	GE	46	Comcast	Panasonic
13	Facebook	Walmart	30	Bosch	Jingdong	47	GE	Philips
14	Alibaba	Dell	31	Xiaomi	Xiaomi	48	Roche	Mitsubishi
15	Oracle	Nvidia	32	IKEA	eBay	49	AstraZeneca	Nestle
16	Dell	LG	33	Fast Retailing	Hyundai	50	Bayer	Unilever
17	Cisco	Target	34	Adidas	P&G			

12) Boston Consulting Group(BCG)의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2022”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글로벌 혁신 기업의 56%가 혁신,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상위 3대 이슈로 평가

- 글로벌 혁신기업은 탄소중립에 집중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 생산,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에 준비된 기업은 소수에 그침.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Climate and Sustainability, 이하 C&S)을 상위 3대 경영 이슈로 고려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기업의 비중은 평균 65%로 조사됨. C&S를 상위 3대 또는 상위 이슈로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내구재산업으로 38%의 기업이 상위 3대 이슈로, 48%의 기업이 상위 이슈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는 관광 및 호텔산업 분야의 34% 기업이 상위 3대 이슈로, 40%의 기업이 상위 이슈로 평가함. 도소매업 분야 34%의 기업도 C&S를 상위 3대 이슈로, 상위 이슈로 평가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도 34%로 조사됨.

<그림 1> 기후변화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최우선 이슈로 평가한 혁신기업의 비중



주 : 전체 조사대상 기업 수는 1,010개

- BCG는 혁신(innovation)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갖는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함.
 - 지속가능성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9개 산업(교통, 항공, 에너지, 석유화학, 농업, 소비재, 건설, 산업재, 패션) 분야에는 장애 요인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BCG가 꼽은 주요 장애 요인은 기업의 역량 부족, 탄소배출을 필수로 하는 성과와 가격 중심의 전략, 낮은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 수준,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인프라, 지속가능성과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상품과 프로세스 설계 체계 등임.
 -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체계의 개선이 지속가능성 달성의 관건으로 평가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